

건설소식

도시가스로 전기·온수 만드는 아파트 나온다

GS건설, GS퓨얼셀과 내년부터 연료전지 보급...유해물질 발생 없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최초로 가정 내 도시가스를 이용, 자체적으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아파트가 등장한다.

GS건설은 그룹사인 GS퓨어셀과 공동으로 2010년부터 연료전지 보급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전지 시스템은 도시가스를 이용,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기술로, 가정 내 설치될 경우 전기의 자급자족이 가능해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기술은 전기 생산과정 중 분진 등 유해물질 발생이 전혀 없으며 CO₂ 발생량도 현저히 줄여 그린홈의 중요 기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GS건설은 내년도 입주를 앞둔 단지 중 입주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100여 가구에 시범적으로 이 연료전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연료전지의 설치비용은 가구당 6,000만원 선으로 정부지원 80%, 지자체 지원 10% 등을 제외하면 사용자 부담은 10%선이다.

GS건설은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 평균 188㎡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약 720kW 규모의 전기를 생산, 연간 가구당 약 2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연료전지 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10만호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의 주요 기술의 하나”라며 “GS건설은 이번 연료전지 보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하우스 개발에 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두 위탁’ 하도급 계약도 법적 효력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으로 일방적 취소 등 예방...내년 하반기 적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구두로 위탁한 하도급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른바 ‘하도급계약 추정제’로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 후 일방적인 계약취소, 대금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이다.

또 하도급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법인은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

취·유용 행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원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하도급업체가 예약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확인을 요청한 후 원사업자가 15일 이내 인정·부정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 발급 유도과 구두계약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하도급대금 조정이 한층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현행 3,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선을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특정물품(레미콘)의 하도급법 적용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1인 1사 대리제'로 입찰질서 바로잡는다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 개정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대리인 자격이 강화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은 입찰대리인 등록 시 중복등록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등록된 대리인의 경우에도 4대보험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자격요건과 달리 1인 1사 등록은 업계의 준비기간 부여, 제도 변경

에 따른 업계의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3월 31일까지는 자진 정리해야 한다.

조달청은 또 해당 품목을 생산·제조하지 않는 업체가 제조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물품만 해당 제조업체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만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다만 신규 업체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현지실사를 거쳐 설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산업분류번호 부여 시 공장 현장조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물품과 실제 생산·제조되는 물품이 다른 경우를 차단기 위한 현장실사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절감 못하면 아파트 못짓는다

한가구라도 친환경 성능기준 미달 땐 사업승인 안돼

앞으로 에너지절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과 하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을 보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승인받으려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설계적합성은 건축물 설비기준규칙에 따른 표준 건축물과 비교한 에너지·이산화탄소배출 절감률(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14개 요소 평가)을 토대로 산정한다.

성능평가를 면제받으려면 60㎡ 초과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60㎡ 이하는 2등급 이상)을 받거나 새 성능기준에 명시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 성능기준이 제시하는 설비는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 조명, 대기전력타당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등 의무사항과 친환경 자재, LED조명, 옥상·벽면 녹화 등의 권장사항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주택단지 중 단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치 못하면 사업승인을 금지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단지별 에너지 절감률이 투명하게 공개돼 경쟁사와 비교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장사항이라도 사실상 의무조건처럼 운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상한 책정 때 실비로 반영한다.

그러나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의한 에너지성능 부분에 대한 배점은 새 기준과의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분양

가상한제 상가산비 인정 배점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은 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 공동주택까지 일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단열, 창호, 난방 등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 위주로 운용하되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에너지저감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에너지 제로 주택’을 구현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기준에는 주거·비주거 복합건축 때 지하층 변전소 설치 허용,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 완화(2→2.5m 이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 폐지, 소방통로 확보의무 신설, 난방계량기 설치 일원화(열량계) 등도 포함돼 함께 시행 된다.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쟁걸음'

16개 기업 방안 논의

국내 플랜트업체가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플랜트업체 16개 주요 기업 임원들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울산·경주 지역 11개 기자재 업체 대표들과 만나 기자재 구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산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대통령주재 국가경영비상경제대책회의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업계 간담회에서 플랜트 산업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된 것으로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제안, 추진됐다. 국내 플랜트 업체는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해외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고 있으며 이 중 250억 달러(약 30조원)를 기자재 조달에 투입하고 있으나 국산 기자재 구입액은 6조원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체에 따르면 플랜트 공사의 원가 구조는 엔지니어링 5~10%, 건설 20~35%, 기자재 60~85%로, 기자재 분야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해외 플랜트 공사는 2003년 64억 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국내 업체의 기술이 높아지면서 연 평균 5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462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내는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플랜트산업협회는 2015년 우리나라의 플랜트 분야 해외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 기자재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 국산화는 갈수록 수출 증대 효과를 크게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은 “플랜트 공사 수주 대기업체들과 기자재 공급 중소기업의 협력 확대, 동반 발전은 한국 플랜트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